

바른정당과 통합론 부상...국민의당 '뒤숭숭'

“원내 60석 중도 지향 캐스팅보트로” 중진 중심 공감대 호남 민심 역풍 가능성...일부 초선 민주 입당설 제기도

국민의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연대론'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바른정당과의 조속한 통합 추진을 주장하면서 촉발된 논의는 '포스트 대선' 국면에서 정계개편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대한 공감대가 일정 정도 확산된 상황이다. 양당이 각기 중도를 지향하며 정체성에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이번 대선에서 뼈저리게 절감한 소수 정당의 한계를 외연 확대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위 정치 혁신을 기반으로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이견만 조정하면 동서 화합과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의 관계자는 14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다면 원내 60석의 그야말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함께한다면 그야말로 중도 정당의 틀을 갖추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당에 대한 '구애'가 오히려 위기감을 자극하며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키우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호남지역 대선 득표율에서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크게 밀렸다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원심력이 점점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

이 당내 구심력을 강화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띄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일부 초선 의원들의 민주당 입당설도 제기되고 있다. 또 국민의당은 최근 조각에 착수한 문재인 정부가 연정 차원에서 야당 측 인사에 내각 참여를 제안할 것이란 설에 대해서도 '야당 흔들기'로 규정하며 차단해 나갔다.

그러나 당 대 당 통합에 이르기까지의 험난한 과정과 대북정책 등 정체성 차이를 염두에 둘 때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개연성이 낮은 시나리오고 정책적 공조와 연대를 실질적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호남 민심의 지지 보다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정치적 정체성은 물론 지역적 기반도

달라 함께 하기가 쉽지 않아 오히려 분란만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주승용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떠낸 것은 민주당 압박과 국민의당의 존재감 부각을 위한 것으로도 풀이되지만 호남 민심의 지지 등 최소한의 자감이 전제되지 않은 '하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연대 논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협치의 제1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0월 국회를 찾았 "뿌리는 같은 정당"이라며 특별한 협력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하며 "동지적 관계"를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을 위해 연대가 필요한 민주당은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임동욱기자 tuim@



표창원, 광주서 투표율 1위 감사 프리허그
더불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광주가 지난 19대 대선 전국 투표율 1위에 대한 감사로 시민들과 사진을 찍으며 프리허그를 진행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劉·沈도 입각 가능”...文정부 ‘통합정부론’에 野 반발

한국당 “야 분열 노린 공작”...국민의당 “연정 협약이 먼저”

야당 인사를 문재인 정부에 기용할 수 있다는 '통합정부론'이 연일 여론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관련,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오히려 협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11일 CBS 라디오에서 통합정부 구상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에 전화해 '경제부총리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각당은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지

난 1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야당 의원을 내각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은 야당 내부의 분열을 노린 수준 낮은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벌써 이런 수준 낮은 정치공작이나 꿈꾸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원내 당무부대표인 최경환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및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협치와 연정은 정책협약, 연정 협약이 먼저"라며 "청와

대와 민주당이 진정한 협치와 연정 의지가 있다면 이런 연정 협약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각설이 제기된 유 의원의 소속정당인 바른정당도 '유승민과 바른정당 죽이기'라는 식의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 핵심 관계자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발언"이라며 "이런 식으로 협치를 한다는 것인지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제안이 안 온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다"며 "(제안이 오더라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2일 바른정당 유승

민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입각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희가 유·심 후보에게 입각을 제안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많이 돌아서 간단히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두 분께 입각을 제안한 적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구난방식으로 야권 인사들의 통합정부 합류설이 흘러나온다면 오히려 협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여권이 보다 신중하게 협치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 첫 출근

청문회 준비 착수...재산·아들 병역 해명 통과 전망 우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첫 출근해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아들 병역, 재산등록 등의 문제가 불거졌으나 이 후보자의 해명으로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돌발변수가 없을 경우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국무위원과 관련해서) 아마 이번 주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으로 국무위원 제청이 가능하다는 질문에는 "(문 대통령) 저의 의견을 물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식 제청이라기보다는 정치 행위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헌법이 정한 총리의 권한과 한계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책임총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는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지난 12일 오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후보자는 같은날 전남지사 퇴임식과 함께 사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으로 총 16억797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서울 종로구 평창동 땅 (450㎡·5억2110만원)과 서초구 아파트

(85㎡·7억7200만원), 예금(2475만원) 등 13억5927만원, 배우자 명의로는 3억 251만원 상당의 예금, 모친 명의로는 영광 법성면의 땅과 논 등 179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장남과 손녀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병역과 관련해 이 후보자 본인은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육군에 복무하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02년 3월 재검 대상으로 분류돼 같은 해 5월 '견갑관절의 재발성 탈구'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았다. 총리실은 "이 지명자는 아들의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규칙상 어렵다는 판정 결과를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희망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청문회 준비반은 최병환 국정운영실장(1급)을 반장으로, ▲정책팀 ▲신상팀 ▲정무팀 ▲공보팀 ▲행정지원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 같은 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31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는 전남지사로서 마지막 행보로 지난 12일 여수수산시장을 찾았으며, 상경 전남인 13일에는 11일에도 방문한 목포시항을 둘러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윤현석기자chadod@연남뉴스

청와대 정무·사회혁신·사회수석 프로필

정무수석	사회혁신수석	사회수석
 전병현 (59) 충남 홍성 휘문고, 고려대 정외과, 하버드대 대학원 SFP과정, 고려대 정책대학원 경제학	 하승창 (56) 서울 마포고, 연세대 사회학과, 동대학원 사회학과	 김수현 (55) 경북 영덕 경북고, 서울대 도시공학과, 동대학원 도시공학과, 서울대 행정학 박사
김대중 대통령 정부비서관, 국정상황실장, 제17~19대 3선 의원, 더민주 최고위원	김성림 정책실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더민주 문재인 후보 선대위 사회혁신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국민경제·사회정책 비서관, 환경부 차관, 세종대 교수, 서울연구원 원장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자산]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